

# 農道 전남 재정 열악 지자체에 든든한 '구원투수'

## 문재인 정부 '고향세' 도입 가시화

도시민들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초과분 16.5~33% 공제 세금이 아닌 기부금... 수도권 반발 크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고향세'(고향 기부금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고향세 도입을 요구해왔다. 고향세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숨통이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 도입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도시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세법 5건 중 전 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갑)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의 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도 기부금과 세금공제라는 골격을 토대로 고향세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연 소득의 10%까지 본인이 지정하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관은 있지만 긍정적=고향세 신설은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관건이다. 유입인구 비중이 높은 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주민세의 최대 30%를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낼 수 있는 '향토발전세' 신설을 준비했지만,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고향세 신설 법안에는 여야 의원은 물론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고향세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이 제도가 '기부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지방세를 거주 지역에서 고향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이어서 반발이 컸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전남 출신 출향민이

서울에 낼 지방세를 중복에 내는 식이었다. 이는 강제성이 필요한 세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옮긴다는 점, 지자체들이 거두는 지방세를 제로섬 양상으로 만드는 점 때문에 현실화되기 힘들었다.

하지만, 개인 의사로 내는 기부금은 내는 곳을 자신이 정할 수 있으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제로섬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선해야 할 과제는=기부 대상 지자체의 범위, 기부금 한도 설정과 담배품 기준 마련 등은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현행 고향세 법률안은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도시지역 지자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고향세 도입 초기 기부금이 대도시에 쏠리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도입 첫해인 2008년 모금액 1위 지자체는 도쿄였고, 대도시인 오사카가 4위를 차지했다. 기부 대상 지자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법안을 통해 "기부 대상 지자체를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제한하자"고 했다.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도는 기초지자체(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89곳(39.4%)이다. 기부 대상 지자체를 '재정자립도 25% 이하'로 설정하면 대다수 농촌지역 지자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기부금을 내면 기부자(출향민)는 일부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지자체)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세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도 고향세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됐다. 이는 지방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데다, 지자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 등을 담래하면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출범 76일만 전원 새 국무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열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전원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동거정부 끝... 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 문재인 대통령

###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 출범 76일 만에 새로운 각료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갖고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며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조직이 개

편되고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의 경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로,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는데 국민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됐다가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시고 논의하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에서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초 될 것"이라며 "그

것은 바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려 한다"며 "토론이 끝나면 전 부처가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특별히 강조해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투명한 검찰·바른 검찰·열린 검찰 만들겠다"

###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등 과제 산적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대검찰청 본관 15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정부 초반 2년간 조직을 이끌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국정과제 실현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구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논의를 연내 매듭지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공소 유지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의 전 정권 문건 수사, 면세점 비리 의혹, 방산비리 적결까지 사정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동시에 '무소불위'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막강한 수사권을

내려놓고, 조직 문화도 개선하는 등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도 이뤄내야 한다.

26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기간 미뤄진 이번 인사는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임명장을 주며 문 총장에게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어 인사 폭은 어느 때보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에서 중간간부로 이어지는 '인사 태풍'이 지나간 뒤 중요하는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 방향에 대한 내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문 총장의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복잡 다양한 개혁 과제를 끌어안고 출범하는 문 총장이 안팎의 거센 도전에 맞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검찰을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일보 65주년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제품(이전) 보증금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제품(이후) 보증금 적용	비고
재활용병 사용량 제17조 규정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제17조 규정에 따른 제품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음료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